



'건설70년, 세상을 새롭게' 모두를 이롭게'를 주제로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의날 행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삼호 건설산업연구원장으로부터 70년 건설의 발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 총리, 이 원장,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안윤수기자 ays77@kbs.com

외국인 근로자 많은 건설현장 '최저임금 폭탄'

내년 최저임금 16%대 인상을 앞두고 건설현장이 '원가비상'으로 풀버리를 앓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이 고용하는 단순 노무직의 상당수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여서 인건비 급등이 불보듯 뻔해졌다. 20일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일반 외국인 취업비자인 E-9비자 취득자 중 건설업에 할당된 '도입 쿼터'는 2400명이다. 지난해에는 2500명, 2015년에는 2300명, 2014년에는 2350명의 E-9비자 외국인력이 건설현장에 투입됐다. 건설업 도입 쿼터는 전체 E-9비자 취득자의 5~10% 선이다. 제조업에 대부분의 쿼터가 할당되고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 순으로 할당 규모가 크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득한 비자는 크게 세 가지다.

단순노무 인력 인상분 적용 올해 현재 1만2000명 추산 인건비 수직상승, 원가 비상 900명 고용 S건설사 경우 내년 33억 추가 비용 부담 해외 전문가 양성을 위한 F-4비자와 조선티족 등 방문취업 토포 대상인 H-2비자, 일반 외국인인 E-9비자 등이다. F-4와 H-2비자 취득 외국인력의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직종별 시중노임단가에 따라 책정된다. 다만 언어 문제로 인해 국내 근로자들보다는 적어 간접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있다. 단순 노무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E-9비자 근로자들에게는 최

저임금이 적용된다. E-9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3년간 국내에 체류하며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로 일할 수 있다. 비자를 연장하면 최대 4년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현재 건설현장 내 E-9비자 취득자는 1만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6470원)보다 16.4% 오른 수준이다.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이 때문에 E-9비자 취득 외국인들이 고용하는 건설현장은 인건비 상승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실제 태널 전문인 S사의 경우 현재 약 9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인건비가 연간 200억원 수준이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약 33억원

을 더 부담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오지의 건설현장에서는 내국인 근로자 고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E-9비자 외국인 고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면서도 "인력 수급의 어려움 탓도 있지만 내국인은 물론,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것이 근본적 이유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비교해 인건비에 차이가 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자국의 임금수준과 숙련도 등을 감안해 책정된 금액"이라며 "다국적 외국인 근로자는 숙식제공이 의무여서 최저임금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올리면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성중기자 kwon88@

"제3연륙교·수도권매립지공사 조기 진행돼야"

"제3연륙교 조기 착공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이낙연 인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장(정일종합건설 대표)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 외에도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85km, 폭 6차선 다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과 함께 문 대통령 인선지역 대표 공약사업이다.

이미 건설비 5000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하늘도시 등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켜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제3연륙교 건설 시 기존 면지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 수조원으로 추산되는 손실 부담 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입장 차가 커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회장은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적정 규모의 통행료 산정을 통해 수요균형을 맞추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제3연륙교가 조기 착공돼 지역업체들이 사업에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문제가 지역 건설업체의 일과 관련이 깊다. 현재 환경부 소속인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면 국가계약법 대신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발주공사의 49% 이상에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공사 이관이 마무리되면 수도권매립지에 2조원대의 E-City프로젝트(사업비 1조3000억원)와 테마파크(1조2457억원)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에 생활·건설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를 이관 조건으로 내



지역 의무물량 증가 기대 건설업체 일감 부족 해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하고 민간공사 지역할당 늘려야

세우고, 이를 서구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이관 약속이 2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으로 지역업체 물량이 늘어나면 인천지역 건설업체로선 거품의 단비"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낙후된 인천 구도심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인천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구도심 개발사업을 도시재생뉴딜에 적극 추진하기 위해 '도시정책 대응 TF팀'을 구성했다. 인천시는 우선 인천개항 400주년, 연안부두 어시장, 신항동, 송림5거리, 제물포역, 만수구역, 부평역 등 12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인천은 송도·청라·영종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심이 거의 붕괴상태"라며 "도시재생사업은 성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끈질기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공공공사에 이어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물량 확보에도 노력해왔다. 그 결과 올해 처음으로 하나금융별인재개발원(1800억원) 공사에 지역사 참여비율을 7%가량 확보했다. 제주시 신화역사공원 등 다른 지역 사례를 앞세워 발주기관을 끈기있게 설득한 결과다. 4~5년 전에는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발주 물량의 30%가량을 지역사에 할당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인천 지역업체들이 지역 발주공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잦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는 "인천지역에 대형공사 물량이 많다고 하지만 숙련 강정일 뿐"이라며 "대부분 건설물량이 대형사 위주로 편중돼 지역 중소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재경악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 및 대형 프로젝트 감소도 한 요인으로 꼽았다. 2014년 아시아인계임을 치르면서 인천시의 총부채는 한때 13조원을 넘어섰던 바 있다. 이 회장은 "시가 최근 부채를 많이 줄여 재정위기를 탈출했다"며 "앞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 인천시회는 지난해 송도국제도시 외곽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사무실인 송도센터로 드 25층에선 송도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송도 6·8공구 랜드마크시티 부지와 인천대교 등이 한눈에 보인다. 이 회장은 "송도국제도시는 건설인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되고 있다"며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인천시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2019년에 기념탑과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강원도, 신규도로 건설 탄력

강원도 내 신규 도로 건설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춘천시와 철원군, 화천군은 이날 중앙고속도로 연장 건설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3개 시·군은 중앙고속도로의 화천~철원 연장을 위해 사전 타당성 용역 공동발주와 중앙부처 및 정치권 방문 건의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중앙고속도로 연장은 지역 숙원사업이지만 지난 1999년과 2005년 두 차례 실시한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최근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통행량 증가와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화천권 동서고속전철 연결, 경기도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등 주변 기간교통망 확충에 따른 여건 변화로 중앙고속도로의 연장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서 6축 도로의 일부인 제천~삼척

중앙고속도로 화천~철원 연장
춘천시, 철원·화천군 MOU 체결
123.2km 제천~삼척고속도로는
제천~영월 30.8km 우선 추진
지역건설사 “물량 더 늘어날 듯”

속도로(123.2km)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천~삼척 도로는 지난 2015년 개통된 평택~제천 구간의 연장 구간 개념이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도는 제천~삼척 도로 가운데 제천~영월(30.8km) 구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천~영월 구간의 사업비는 1조 1000억원가량으로 도는 2020년까지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제천~영월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월~삼척 구간도 추진이 빨라질 수

다. 문재인 정부가 제천~삼척 ITX 철도 노선 건설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 서도에서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제천~삼척 도로도 병행해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제2경춘국도 건설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2경춘국도는 경기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부터 강원 춘천 서면 당림리까지 32.9km 구간이다. 통행량이 늘고 있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이 제2경춘국도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끝냈다.

도 건설업계는 도로 건설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동홍천~양양 고속도로의 개통 이후 교통량이 늘면서 서울~춘천 등 상습 정체구간의 통행 흐름이 더 나빠지고 있다”면서 “도로 확장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가닥’

(춘천역~산천리 면허시험장 7km)

강원 춘천에서 속초까지 이어지는 동서고속철도의 도심 구간 건설 방식이 지하화로 가닥이 잡히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애초 고가로 예정된 춘천 구간을 지하화로 수정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시의 최종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기본계획(안)대로 지하화 동의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의 예비타당성 노선에서 춘천 구간의 경우 춘천역에서 신사우동 두미리아파트, 강원도교육청, 신동솔밭, 국군병원, 신복읍 산천리 면허시험장, 발산리 삼한골을 통과하는 16km 구간이 고가화로 제시됐다.

국토부, 춘천시 고가화 반대의견 반영
‘지하화로 수정’ 기본계획안 시에 통보
내달 주민설명회...사업추진 속도낼 듯

하지만 춘천시는 노선이 지나는 신사우동 일대 개발계획 차질과 주변 의암호 경관 훼손, 고가화에 따른 하부 공간 관리에 산 과중 등을 이유로 지하화 건설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강원도와 정부에 지하화 의견을 11차례에 걸쳐 건의하고 춘천시의회도 고가화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하화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 지난 14일 춘천 구간 16km 중 춘천역부터 산

천리 면허시험장까지 7km 구간을 지하화하는 기본계획(안)을 시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오후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춘천시는 예정대로라면 10월 말까지 정부의 총사업비 협의 및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마치고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서울과 춘천을 잇는 경춘복선전철과 연계해 춘천역~화천~인제~속초 노화동까지 92km를 단선 전철로 연장하는 것이다. 서울 용산역에서 춘천역까지 59분, 춘천역부터 속초까지 43분으로 예정돼 있다. 국비 2조1064억원을 들여 2026년 개통이 목표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하용환 석진건설(주) 대표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 20일 서울 노원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70년 건설의 날' 행사에서 산업 훈·포장 수상자들이 가족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새로운 70년의 시작, 국민의 행복...’ 9대 미래비전 선포

장·관계, 건설인 1000여명 참석
‘한국건설통사’ 봉정식·사진전시
유공자 산업 훈·포장 수여식도
기술혁신 통한 일자리 창출 다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가 주최하는 ‘건설 70년 건설의 날’ 행사가 20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건설 70년, 세상을 새롭게! 모두를 이롭게!”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장, 유주현 건단련 회장 등 정부와 국회, 유관 단체 기관장 및 건설사 임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건설회관 1층 로비에는 대한민국 건설 7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사진 전시회가 열렸고, 대한민국 5000년 건설 역사를 집대성한 편찬한 《한국건설통사》의 봉정식도 진행됐다.

이낙연 총리는 축사에서 “지난 70년간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키웠고 위상을 높였다. 건설인에 많은 신세를 졌다”며 “앞으로 건설산업과 건설인을 힘껏 지원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유도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주현 건단련 회장은 “건설업계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첨단 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건설 수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린”고 당부했다.

건단련은 “새로운 70년의 시작, 국민의 행복을 새워갑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



지랑스러운 건설인상을 수상한 수상자들이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위사진).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의 축하공연 모습.

래 스코프가치 산업과 △수요 맞춤형 시장 조성 △상생협력의 산업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선도 △대한민국 건설 브랜드 △신뢰받는 건축문화 구축 △미래 세대 일자리 조성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 창출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 9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하용환 석진건설(주)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위)을, 황희수 현대건설(주) 상무와 손경호 ㈜삼화피앤씨 대표, 김재홍 ㈜동부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건설인 152명이 정부 훈·포장 및 표창을 받았다.

또 건설산업 70주년을 기념해 신형철 한동건설(주) 대표와 정성욱 ㈜금성백조주력 대표, 노석순 원영건설(주) 대표, 정달홍 ㈜성보엔지니어링 대표, 신재호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 회장 등 5명이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을, 박현태 ㈜영무도건 대표 등 19명이 ‘건설산업발전 공로상’을 수상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유관기관 대표들이 20일 오전 전 임직원들 대상으로 출근맞이 기념벽을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건설 70년 기념 행사에 참여한 건설인 100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터뷰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정부 SOC 투자는 국민 복지와 직결 美 건설시장 진출 전략도 적극 모색

건설 70년에 대한 소회는, 감격스럽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의 초석을 다짐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발전사를 주도했다. 안으로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밖으로는 건설인의 땀과 노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건설 한류’를 이끌어낸 70년이었다.

민간주택시장 영향으로 건설경기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체감경기는 나쁘다. 건설업체의 99%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은 인프라 투자 축소로 따른 극심한 물량난과 수익성 악화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산업의 대들보인 대형 건설사들조차 해외수주 급감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축에 따른 물량난과 적정공사비 미보장에 따른 경영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한다. 새로운 70년에 대비하려면 건설업계의 뼈를 깎는 혁신과 노력 외에도 정부와 국회, 언론의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자본달 문제인 대통령의 방미길을 함께 했다. 향후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시장 진출 전망은.

국내 건설산업이 정체기를 맞고 있는 만큼 해외시장 진출 국가를 다각화하고 진출 전략을 짜야 한다. 문 대통령 미국 방문에서 ‘한·미 비즈니스 서밋’ 등 경제인 행사와 현지 주재 건설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두루 만났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우리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유관기관과의 협의 중이다. 최근 해외건설이 단순도급 위주에서 투자가발형으로 전환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을 적극 모색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이강호 건설산업연구원장 ‘한국건설통사’ 편찬을 기념하는 봉정식을 하고 있다.

가시화되고 있다. 건설업계 준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연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 규모다. 국민 주거환경 개선과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출범, 도시재생사업 준비를 마쳤다. 도시재생은 물리적 개발보다는 사회·경제·문화 등 소프트웨어적 기능회복이 주목적이다. 건설업계도 이런 사업 특성에 맞춰 경영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도 민간자본 활용 등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줬으면 한다.

새 정부도 SOC 예산 감축 기조다. SOC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이미 충분한 도로·철도 등 인프라 시설이 구축돼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로교통 등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이다. 인프라 투자는 단순히 건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통·생활편의 제공을 통해 국민을 위한 보편적 공공복지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SOC 투자가 곧 고용·공공 복지다. 김태형기자

아하! 그렇구나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법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서 법률의 적용 범위를 하도급관계나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그런데 하도급법이 모든 하도급업자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에서 말하는 '건설위탁'이라 함은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하도급거래법 제2조 제9항 각 호의 건설업자 사이에 동일한 업종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제외)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 바, 전기공사업법과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지 못한 건설업자가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를 할 수 없어 다른 전기회사에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였고, 그중 전기공사는 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상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공사도급계약은 하도급법상의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 27470 판결).

이응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